



정치 > 통일

교착된 남북관계 속에서도...통일부, DMZ 사업 준비 '착착'

서호 차관 '접경지역군수협의회' 참석...DMZ사업 설명 '남북접경협력과' 신설...올해 말까지 DMZ 실태 조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2-21 16:59 송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해안 철책부터 금강산 전망대까지 비무장지대(DMZ). 2019.4.3/뉴스1 ©News1 고재교 기자

얼어붙은 남북 관계 정세 속에서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비무장지대(DMZ)를 이용한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호 차관은 이날 접경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DMZ 평화적이용 남북간 합의사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008년 출범한 접경지역 군수협의회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10개 시군의 기초지자체단체장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들은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만 통

일부 차관이 참석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부가 추진 중인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한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고성군은 △고성 유엔평화특별도시 조성 △이산가족 기억 속 고향의 봄 복원 △고성 물류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통일부에 건의했다.

통일부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해 DMZ 전체 실태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첫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역시 이번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일부와 유엔사 간 뜻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구상한 본래 DMZ 실태조사 사업은 '남북공동' 조사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로 다소 시간이 흐르자 향후 관계가 호전될 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측 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DMZ 내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지정, 지리 협력제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DMZ를 활용한 남북 협력을 꾀하고 있는 통일부는 지난 4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승격된 '교류협력실'에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했다. 이 과는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는 물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실질적 사업 진행하겠다"면서 "DMZ 실태조사,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를 실시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외 공론화·기초연구 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이같이 노력에도 향후 남북관계 협력 물꼬가 트이기까지

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북한이 국경을 닫았고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대선정국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접촉이나 교류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대북사업의 진척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서 접경 협력, 개별관광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